



독일 · 프랑스 정상회담, 새 재정협약 이번 달 마무리

김혜란 연구원

■ 1월 9일 독일과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갖고 신 재정협약을 이번 달 마무리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.

- 양국 정상은 작년 12월 EU 정상들이 합의한 새 재정협약 및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 확충 등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합의함.
-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(ESM) 기금 확충을 위한 자금투입 시기를 앞당기고, 유럽중앙은행(ECB)의 EFSF 대출 필요 여부 검토를 위해 전문가를 요청할 것임.
-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운용 규범집을 1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며, 신 재정협약에 대해 회원국의 서명이 3월 1일까지는 완료돼야 함을 언급함.

■ 양국 정상,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.

- 유로존 위기 해결을 주도해 온 두 정상은 그 동안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.
-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의제에 포함하였으며, 중·소형 기업 지원과 청년실업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유럽 각국의 고용시장 관행을 비교함으로써 노동이동성(labor mobility)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강조함.

■ 양국 정상, 그리스에게 2차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안 신속 이행을 촉구함.

- 그리스가 민간채권단과의 부채상각 협상 등을 포함한 2차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안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다음 지원에 나설 것이며, 그리스가 트로이카 국제기구들에 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.
- 그리스 문제는 10일 열릴 국제통화기금(IMF) 총재와의 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임.

■ 양국 정상, 3월 EU 정상회담 전까지 금융거래세(토빈세)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안 마련에 합의함.

-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부담 감소 방안으로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.1%, 파생상품에 대해선 0.01%, 외환 거래는 단기 파생상품에 과세함.
- 양국 정상은 오는 30일 EU 정상회담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EU 재무장관들이 구체적인 실행 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함.
- 프랑스 대통령 Sarkozy는 프랑스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도할 것이라 밝혔으며, 독일 총리 Merkel은 금융거래세는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원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지지함.
- 그러나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,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.

(Financial Times 등, 1/9)